

중국, 섬유류 제3국 우회수출 금지

미국 · 유럽 수출위해 타이 · 베트남 거쳐 ... 업계는 수출차단에 반발

무역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이 무역마찰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동방조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수출제한을 피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해 미국과 유럽에 섬유류를 수출하는 섬유기업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의 일부기업들은 섬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타이나 베트남 등 제3국에서 물품을 옮겨 실으면서 원산지증명이나 상표를 붙이고 있다.

현재 중국과 미국, 중국과 유럽간 섬유협정에는 위법적인 환적 활동이 적발되면 당해연도 혹은 다음 1년간 수출물량에서 불법 환적 물량만큼을 공제하게 돼 있다.

중국 상무부는 각 지방정부에 공문을 보내 불법적인 환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와 개선을 당부하고 발견되면 엄격히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제3국 환적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됐다.

미국은 조만간 조사단을 타이와 베트남에 보내 중국의 환적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유럽도 중국이 대륙 쿼터 물량에서 배제된 홍콩이나 마카오를 통해 유럽으로 섬유물량을 실어내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06년 들어 홍콩과 마카오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가는 섬유물량이 각각 234%, 150%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는 중앙정부의 환적 단속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강하다.

중국 섬유류의 질이 좋고 가격이 낮은 만큼 미국이나 유럽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를 강제로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자금과 상품의 교류에 막힘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기업들이 제3국 환적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14>